

목어

정치꾼의 망발

조선 식민지화는 세도정치로 상징되는 한국인의 차별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차별, 남녀의 차별, 가문의 차별 그리고 지역 차별 등의 분별 차별은 '내 편이 남'이라는 좁은 마을 의식과 오랜 해국에서 넓은 시야를 잃고 눈앞의 이익을 찾는 퇴역성과 얽혀 있다. 먼 적보다는 가까운 이웃을 미워하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보수성, 집단 이기주의적인 성향이다.

근대화는 작은 가문이나 지역의 이익보다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국가를 요청한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는 일찍이 국민국가를 형성한 나라가 그렇지 못한 민족을 식민지화하는 시기였다. 한국은 그 공소대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간의 독재 정권은 지역 차별을 정권의 기반으로 삼아 왔으며, '우리가 남이'식의 선동으로 타지역을 차별해 왔다.

식민지화, IMF 관리체제는 한결같이 한국인의 병적인 차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차별주의는 민족 반역자의 길이다.

최근(2월 24일) MBC TV토론에서 전 청와대 비서실장인 김광일씨는 "지역 정서를 존중하는 일이 곧 정치가의 의무"라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는 것도 서러운데 마을, 고을마다 분열시키자는 것인가! 실제로 6·25 당시에는 이런 차별 의식이 동족상잔의 비극을 가중시켰었다.

우리는 해마다 3·1절 기념식을 거행하고 노래를 부른다. 그러나 명색이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지역 감정을 부추겨 자신의 입지를 넓고자 날뛰었다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분단되어 지역마다 대립이 계속될 것이다. 1923년 동경 지방에 대지진이 발생하자 우리 동포 7000여명은 조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삼파 동등이 등으로 학살당했다. 물론 어느 특정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었다.

최근 일본의 우경화가 두드러지고, 그 중 일부에서는 한국인의 분열적인 경향을 비웃고, 이를 조선 식민지화의 정당성의 근거로 삼고 있다. 우리는 민족본연이 얼마나 심각한 불행에 몰고 왔는지 다시 한번 뼈아프게 각성하고, 민족이 하나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김용운(한양대 명예교수·본지는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발행·편집인: 김광삼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 신문진흥위원회 및 그 실천을 추진한다
인터넷 현대불교 www.buddhania.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비지정 문화재 "서럽다"

관리방치 언제까지

'일반절도'로 분류

공소시효 5년뿐

"문화재법 개정절실"

도난당한 비지정문화재들을 쉽게 되찾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비지정 문화재 도난범에 대한 공소시효와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재 보호법상 국보나 보물 등으로 지정된 문화재는 그 소재가 확인만 되면 언제든 돌려 받을 수 있지만,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 절도'로 분류돼 5년 정도의 공소시효가 지나면 되찾을 방법이 거의 없다.

지난 한해 동안 경북 공룡사, 전북 개암사, 경기 보광사, 충남 정혜사 등 조계종 산하 18개 사찰에서 비지정문화재 60여점을 도난당했다. 이 가운데 회수된 문화재는 2점에 불과하다. 도난당한 문화재의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절실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다.

차체에 법개정 전이라도 특례 규정이 마련되면 화랑가나 골동품 등으로 유통되는 불교 문화재는 시기차만 있을 뿐 근본적으로 모두 장물임을 상기시킴으로써 성묘 매매와 도난을 줄이는 방편의 하나가 될 것이다.

사실상 현행법은 지정 문화재 손상·절

취·은닉 등에 처벌규정을 적용하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비지정 문화재 도난을 방조하는 법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불교계는 비지정 문화재를 훔치는 문화재 사범들의 처벌 규정 마련을 관계 당국에 강력히 요청해 왔다. 지난해 9월경 문화재 보호법 개정이 한창 논의되고 있을 때, 조계종 총무원은 △비지정 문화재 보호를 위한 처벌 강화 △비지정 문화재 손상 은닉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문화재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절도법의 표적이 되고 있는 비지정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하지 않았다. 불교계에서 숙원하고 있는 성묘 도난 근절책이 반영되지 않은 채, 수많은 성묘문화재의 도난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비지정 문화재를 보호할 수 없는 현행 문화재 보호법은 그야말로 '지정 문화재'에만 해당하는 '보호법'인 셈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올해 법개정을 재추진해 이를 반영하겠다고 문화재청이 밝혀왔다"며 "법개정 재추진과 관련한 총무원의 입장을 조만간에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해와 같은 '개악'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지켜보면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외에도 비지정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서는 관계 당국은 문화재 사건을 수사할 전담 기관을 신설하고,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문화재 사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재를 모으고, 조계종 단원에서는 성묘를 잃고 신고하지 않은 사찰 주지를 엄하게 징계하는 등



조계종총무원은 청사에 도난 문화재 반환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한편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각적인 비지정 성묘문화재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ania.com)

사면대상자 참회 '선결과제'

'조계종 대사면 증언개정 가능한가'

총무원이 증언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앙총회에서 증언 개정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 증언 개정은 총무원 재적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개정 가능성을 속단하기 어렵다.

총무원의 증언 개정안 제출 이후 총회위원들은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총회위원은 "정화회의에서 제기한 총회위원 자격상실확인 소송 등의 재판이 계속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사면 실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정화회의에서 총무원과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7건에 이른다.

정화회의는 이번 주 중 모임을 갖고 총무원의 증언 개정안 제출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방침이어서 사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무원이 마련한 증언개정안에 통한종단 이후의 종단 징계자를 사면 대상으로 하되 '참회 지속하는 자'를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총회 개최 이전에 사면 대상자들의 '회합' 여부를 증언 개정의 관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무거워지고 있다.

1. 불기 2543년(1999) 10월 12일 제정, 공포된 해행위조사 특별위원법에 의한 징계자들에게 대한 특별법에 의하여 행해진 징계의 경감 결정은 증언 제23조, 36조6호, 54조9항, 56조1항10호, 125조, 12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행위조사특별위원'에 의한 징계자들에게 대한 특별법에 의하여 구성된 특별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정한다.

2. 불기 2544년(2000) 종단 화합과 분구 종식을 위하여 불기 2506년(1962) 통합종단 이후의 종단 징계자 중 참회 자숙하는 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은 증언 제128조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3. 단서 위 1, 2의 경우에 있어서 멸빈자에 대하여는 다시 승적은 회복할 수 있지만 일체의 공적에 취임하는 복권은 허용하지 아니 한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불성·체험 바탕돼야 이해 정확

선어록 제대로 읽기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선사들의 대화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다. 필자는 여기에서 하나의 방법을 제안해 본다. 우선 우리들의 일상 대화를 보자. 상대방이 경소에 사용하는 말투나 논리를 알고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보다 정확하게 서로의 의사를 주고받을 수 있다. 선사들의 대화도 마찬가지이다. 선사들이 쓰는 말투와 그들이 대화하는 방법을 미리 알게 되면 그들의 대화보다 정확하게 이해된다.

그러면 선사들의 대화에 나타나는 공통된 논리는 무엇인가?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진언연기론에 입각한 불성사상이고, 하나는 당사자의 직접적인 체험의 강조이다. 먼저 진언연기론에 입각한 불성사

상을 보자. 모든 사람의 본성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성되었는데, 이런 본성이 번뇌와 욕심에 뒤덮여 제 기능을 못한다. 그런데 번뇌나 욕심은 실제(또는 자성)가 허망하기 때문에, 그 허망함을 자각하여 무심하게 그 본성에 내맡겨 그 본성을 따르면 그것이 깨달은 이의 삶이다. 선사들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선어록을 읽을 때, 이 논리를 미리 알아두면 선사들의 대화를 보다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다음으로 당사자의 직접 체험을 보자. 어느 선어록을 보더라도 깨달음이란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그것도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한다. "부처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선객의 질문에, "호떡"이라 대답한 조주선사의 말이 있다. 이 말은 호떡으로 상대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부처 내지는 깨달음의 문제는 남의 입을 통해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입 닥치라는 호령이다. "서강에 흐르는 강물

을 다 마시면 부처가 무엇인지 말해주겠다"는 말도 역시 이것이다. 내가 대답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남의 설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사자의 직접적인 체험을 강조한다. 이런 대화는 선어록에는 이렇듯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

그러나 선어록의 이면에 깔린 논리를 이렇게 정리한 것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독서 체험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독자 여러분들은 단지 필자의 체험을 참조할 뿐이지, 절대로 그냥 믿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체험만이 진실할 뿐이다. 부처의 체험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체험을 언어나 문자로 표현하여, 그 표현과 체험이 일치하는가를 늘 관조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자신의 수행이 제대로 되는지를 항상 검토해야 한다. 성철스님께서 평소 말씀하시던 동정일어, 오매일어, 동종일어가 되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여, 자신의 화두수행을 점검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신규택 연세대 철학과 부교수

자, 그러면 지난 번 신문(259호)에서 선어록에는 속어나 구어체가 많이 나온다 고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대답은 이렇다. 태광에서 석탄을 캐기 위해서는 여러 장비가 필요하듯, 선어록 읽는 데도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 선어록이 중세 중국어로 기록되어 있는 문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어록의 해석도 이런 언어의 역사성 속에서 진행해야 한다. 아무리 특수성을 강한 선어록이라도 중국 문헌의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다. 선어록만의 독특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선어록도 역시 당시의 언어 습관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 마디로 말해서 중국어를 잘 읽을 줄 알아야 한다.

필독 도서로 다음을 권한다. 太田辰夫의 《中國語史文法》(江南書院, 1957년 초판, 朋友書店, 1981년 재

판), 《中國歷代口語文》(太田辰夫, 朋友書店, 1957년, 1982년 개정), 《中國語史通考》(太田辰夫, 白南社, 1988년). 다음은 모르는 낱말 뜻을 찾기 위한 사전이 필요하다. 《翰漢大字典》(이상은 감수, 민중서관)과 《韓辭典》(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을 우선 찾아야 한다. 그리고 더 정확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韓文韻府》 및 《經典彙考》의 성어에 참고는 《大漢和辭典》(諸橋徹次, 大修館書店)이 좋다. 이와 더불어 최근 대륙에서 심혈을 기울여 간행한 《漢語大詞典》(상해출판사, 전 11권)과 《漢語大字典》(사천사서출판사 호북사서출판사, 전 8권)이 아주 좋다. 그 다음에는 불교 사전이 있다. 교리에 관한 용어는 《불교사전》(이운하, 동국경역원)과 《佛敎語大辭典》(中村元, 東京書局), 《佛敎辭典》(中村元, 岩波書店)이 좋다. 선에 관한 것으로는 《禪學大辭典》(駒澤大學), 《禪學辭典》(일지, 이철교, 신규택 공저, 불지사)가 있다. 구어와 속어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필요한 공구서는, 《禪語辭典》(古賀英彦, 思文閣出版), 《禪宗著作詞語匯釋》(袁瑛, 강소고적출판사), 《宋元語言詞典》(龍澤庵, 상해사서출판사)가 있겠고, 신규택의 《중국선사의 번역을 위한 문헌학적 접근(2)》 '백련 불교논집, 제2집'이 있다.

Advertisement for 'Shi's Fragrance' (釋氏香方) featuring 'Five-Part Fragrance' (五分香) and 'Vitality Fragrance' (生氣香). The ad includes a list of benefits, product imag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Seoul branch at 511-5, Sanghwa Buddhist University.